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수신자 : 교육부장관

참 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미래전략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교육비서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 교육부 출입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경유)

제 목 : 교육부와외의 간담회에 관한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의 입장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에서 마련한 2014년 8월 8일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과학 내용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서도, 과학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었습니다. [붙임1]

3. 귀 부가 작성한 회의 자료는 마치 과학계가 과학 시수의 증대를 요구하는 듯이 작성되어, 과학계가 요구하는 바와 다릅니다.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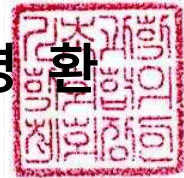
4. 이에, 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요구합니다. [붙임3]

- 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개정 작업 즉시 중단
- 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균형적인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새로 구성

5.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공문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 나타나듯이, 이 간담회를 “교육부가 과학계를 방문하여 검토사항을 설명하였다”는 등 사실이 아닌 표현은 앞으로 교육부 문서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붙임: 1.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문제점  
2.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문제점  
3. 과학계의 요구. 끝.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 김 명 환



담당자 이나래 국장 박여진

기과협 간사 08/18  
대한수학회 총무이사 이종우

협조자

시행 기과협 2014-05 (2014.08.18) 접수  
우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202호 /  
전화 02-565-0361(내선 102) / 전송 02-565-0364 / kms@kms.or.kr

<http://www.basicsscience.or.kr>  
/ 공개

## [붙임1]

#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문제점

국가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종합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서다. 교육과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 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학생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성실하게 반영 하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문서이어야 한다. 현재의 연구위원회는 국가와 학생의 미래에 대한 제시도 없고, 사회적 요구를 성실하게 수용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 할 권위와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 1. 과학과 과학교육학에 대한 몰이해와 무모한 판단

연구위원들은 과학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각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과학교육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 았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지구과학과 물리학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2009 융합형 과학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 하지도 못하면서,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교육과정을 근거 없이 예찬하는 태도 역시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서 도, 과학 내 분야별 중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무모함으로는 우리 과학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 2. 과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소위 교육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 연구위원들은 과학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과학교육과정이 잘못 구성되어 학생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공계 신입생 학력 저하는 신입생을 잘못 선발한 대학의 책임이라 주장한다. 수능에서 과학의 비중을 계속 줄였고, 허울뿐인 선택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과목 편식을 강요하고, 대학에게 교차지원을 강요하여 발생한 문제를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3. 과학교육에서 과학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전문성만 강조하는 위험성

과학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과학교육의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연구위원회가 자신들의 전문성만 강조 하면서 과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방향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교육학의 세부 분야 에 불과한 교육과정학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앞세워, 과학교육에 관한 과학자와 과학교육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 4.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권위적인 태도

교육과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 하다. 연구위원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지적을 자신들의 자격을 무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거세게 반발하였 다. 이러한 자세는 교육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국가교육과정 결정의 절대 권력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 따위는 필요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권위적 태도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 에 대한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 [붙임2]

###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문제점

교육부는 편협한 전공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고,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과학계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기과협은 두 번의 공문에 공히 “연구위원회 개정안의 폐기”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의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교육부는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모습을 부각하기에만 급급하여, 사실이 아닌 자료까지 작성하고 있다.

#### 1.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초중등 교육의 성패는 장차 국가경쟁력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과정 구성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식견이 있는 전문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산업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 연구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권위와 역량도 없다. 교육부 역시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런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연구위원들이 자신들은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오해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각 과목별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과목 쪼개기 때문에 야기된 기본 소양 부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고민은 제쳐두고 세부 과목별 이익에만 매달리는 과목별 연구위원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급자의 이익만 반영된 교육과정으로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할 수 없다.

#### 2. 과학계의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부는 회의자료에 “과학과 교육과정 주요 쟁점 사항”이라며 ① 교육과정 개정시 과학 수업시수 축소 우려, ②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개편 요구, ③ 기타 과학과 교육 강화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과학계는 과학 시수 축소 문제나 과학과 교육 강화를 쟁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개정에는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다. 과학시간 몇 시간 조정으로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식의 생각은 매우 심각한 오해다.

#### 3. 과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표현

교육부는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의 2차 공문에 회신도 하지 않고, 간담회 자료에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의 요구에 대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간담회 이전에 작성된 교육부 자료에는 간담회 당일에 교육부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를 “방문”하여 “검토사항을 설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육부는 과학계 의견을 제대로 검토한 바도 없으며, 방문한 바도 없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표현이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교육부의 요구로 개최된 간담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킨 것도 그런 교육부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 과학계의 요구

현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결정할 권위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조차도 부정한다. 그 결과, 과학기술과 ICT를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제안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 1.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교육과정연구위원회(총론 및 교과 포함)의 개정안 폐지

연구위원들은 과학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한계도 드러내었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자와 과학교육학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하고 있다. 교육의 현실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한 위원회가 내놓는 무모한 시도에 국가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 2.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균형적인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새로 구성

과학계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과학계의 요구를 과학시수 증대를 요구하는 듯이 표현하여 과학계의 집단이기주의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사회를 설득하며 교육과정을 정하자는 과학계의 요구에 교육부도 동참해야 한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